

# “비례대표 줄이자” “안된다”... 회동 재개 10분만에 결렬 선언

## 결국 법정 시한 넘긴 선거구 확정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간 선거구 확정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이로써 선거구 확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이학재 정계특위 간사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김태년 정계특위 간사는 12일 오후 4시30분에 재개하기로 했던 회동을 오후 5시30분으로 연기해 만났으나 협상 시작 10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정오께 국회에서 사흘째 ‘4+4 회동’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1이내→2대1 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에 반대하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섰다

## 16~19대 모두 시한 넘겨 선거 임박 줄속 처리 우려 의석수 확대 절충점 찾을 듯

이에 따라 법을 만드는 국회가 사실상 자신들이 정해놓은 선거구 확정안 처리 법정시한을 스스로 어기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확정된 선거구 확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에는 이번처럼 선거구 확정안의 법정시한이란 개념이 없었으나, 16~19대 모두 선거일을 1~2개월 코앞에 두고 임박해서 처리됐다.

이처럼 국회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선거구를 뼈대하게 확정했던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대 총선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선거구 재확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일단 새해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 올해 12월15일 이후 예비

후보 등록자는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유효해가지만, 해를 넘기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12월5일에 공고될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구가 확정되면 인구와 읍·면·동수가 바뀌어 선거비용제한액도 재산정해야 한다.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정치권의 선거구 확정 기준 마련 ‘마지노선’을 올 12월31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선거구 확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감소라는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여당은 비례대표 의석 감축으로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여야 주장을 충족시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주장하며 여야 대표실에서 농성 중이어서 이들의 요구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절충 가능한 방안으로 비례대표 의석 한 자릿수 내에 감축하고 의원 정수를 한 자릿수 내에 확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구 확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연합 양당 지도부가 국회 의원식당에서 ‘4+4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확정 논의하기 위한 협상 회의를 사흘째 진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농어촌 지역 배려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엔 예산소위 증원 마찰...예결위 또 파행 김재경 위원장 재구성 촉구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증원을 둘러싸고 내용을 빚으면서 파행됐다.

이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예정된 일정에서 사흘을 소비한 상황이라서 예산 심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은 12일 “소위를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이미 의결해 증원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15명으로도 효율적 진행이 어렵다”면서 여야에 소위를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직권으로 이날 회의를 보류했다.

그는 “16명인 법사위원회보다도 예산안조정소위가 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양당 원내대표는 명단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총 17명으로 소위 정원을 2명 늘리기로 전격 합의

하고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애초 명단에 없던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추가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막판에 배재정(비례대표), 최원식(인천 계양) 의원 등을 추가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배정이 유력했던 박해자 의원(광주 서구 갑)이 막판에 밀려나고 수도권 의원이 4명이나 소위에 포함된 데다 농해수위 소속이 한 명도 배정되

지 않으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지역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요직’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내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위 위원들을 각기 1명씩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지만 누구를 제외하느냐를 놓고도 상당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서민 주거안정 입법 보완에 최선”

국회 신임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김동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구속 기소로 공석이 된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김 위원장은 선출 직후 “국토위는 무엇보다 정부의 주거대책을 꼼꼼히 살펴 ‘전·월세 난민’으로 표현되는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입법으로 보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최근 확인된 SOC의 특정지역 편중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호남선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문제를 비롯하여 광주역 주변 상권 활성화와 광주역사 활용방안,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 등 우리 지역의 교통 현안에 대해서도 지역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19대 국회 후반기인 작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이번에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돼 19대 국회에서 서로 다른 2개 상임위원장에 오른 독특한 이력을



갖게 됐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한 번만 맡는 게 관행이지만, 김 의원은 3선 의원이 많은 당의 인력구조상 산업위원장을 1년여

밖에 못해 이번엔 다시 국토위원장을 맡게 됐다

1997년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부실장을 거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산업위에서 활동했다. 부인 조현숙씨와 사이에 1남 1녀.

▲광주(59) ▲서울대 법학과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연구위원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17~19대 의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무쟁점 법안 37건 처리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한달 연장 내달 15일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37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유통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전통신장과 전통신점 인근 1km 이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현재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

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개정안도 가결 통과됐다.

이와 함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약취방지법 개정안과 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이 이날 본

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애초 오는 15일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안을 처리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이 선거일 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선거구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개혁위 활동기간이 12월15일까지 연장됐지만, 이는 한 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하루빨리 선거구 확정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곁엔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 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